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방향과 미래

추무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지난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을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였다. 한반도의 상황이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포함한 4대 협력 구상을 제안하고 ‘남북은 생명 공동체’라고 강조한 데 이어 5월 7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 보건협력 방안을 구체

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정보 교환, 표준 검역 절차 마련, 전염병 진단과 방역에서의 기술 협력 추구, 결핵과 말라리아 같은 질병의 백신 개발, 북한의 야생 식물을 이용한 남북 신약 공동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보건의료 분야를 통한 남북 교류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지금은 그 실천 여부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우리 정부가 남북 공동선언 이행 촉구와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천명하였고, 전 세계적인 2차 유행이 우려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남북 대화 재개를 비롯한 코로나19 방역을 중심으로 한 교류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포함한 보건 의료 분야가 남북 교류·협력의 새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데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와 남한의 대북 지원 현황, 분야별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보건 의료' 교류·협력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북한에서 대북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단체 수는 총 29개로 파악되며, 유엔 기구와 국제적십자사 및 정부기구를 포함하면 주요 대북 활동 기구는 총 40개로 파악된다. 이들 기구와 단체의 보건 분야 지원은 김정은 정권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지원액의 62%를 차지하여 그 이전 10년 동안의 12%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최근 10년간 대북 지원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 의료 분야가 전체 지원(반출)액의 44%를 차지하고, 사회복지 27%, 긴급구호 15%, 일반구호 9%, 산림 3%, 농업 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 과정을 살펴보면, 보건 의료는 주된 안건 중 하나였으며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화된 부분이다.

2018년 9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평양 공동선언에 따라 그해 11월 '남북 보건 의료 분야 회담'이 개최되었고 남북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

지, 남북 전염병 진단 및 예방·치료, 남북 중장기 방역 및 보건 의료 협력 등 '남북 보건 의료 협력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그해 12월에는 국장급 실무 회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정보 시범 교환과 그 외 감염병의 정보 교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어 남북관계 교착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보건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오는 가을 또는 겨울에 2차 유행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염병 정보 교환 및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협의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지난 수년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강화되어 왔음에도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서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십자사, 스위스개발협력청 등의 국제기구와 국경없는의사회, 월드비전, 유진벨재단 등의 국제 비정부기구 20여 개 단체는 보건 의료 분야를 포함하여 2018년 17건, 2019년 38건 등을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북한에 지원하였다. 우리 정부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추진했지만 2016년에 중단되었다가 2019년부터 다시 시작한 상태다.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규모 자체는 축소되었지만 최근까지도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북한 또한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월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방역 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하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북한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외 여러 언론을 통해 북한 당국이 제한적으로나마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중국 등으로부터 받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환자 발생 상황과 방역에 관련된 국제사회의 요청은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보건위기 상황은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이는 남북 간 관계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984년 8월 남한의 홍수, 1995년 북한의 홍수와 2004년 용천역 사고 등 남북한의 재난 상황에서 상호 협력했던 경험과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 전염병과 관련해 남북이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5월 18일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설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 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하여 함께 극복하자고 역설하였다. 코로나19 같은 국제 보건위기 상황은 범국가적 협력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남북의 협력 없이는 한반도에서 감염병 종식을 담보할 수 없다. 앞서 지난 3월과 4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진단 장비, 산소

호흡기, 방역마스크 등의 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는 가장 우선적으로 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기회로 다가올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은 상호 이익 존중 원칙에 기초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며, 과거의 단편적, 일회성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보완적이며 지속 가능한 포괄적 협력 방안을 통해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 구현이라는 공통 목표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협력을 제안·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보건 부문 발전 중기 전략계획(2016-2020)을 통해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질병 예방 및 감시 시스템 강화, 비상사태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대내외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의 일방적인 제안보다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남북 교류·협력의 활로를 열기가 한층 수월할 것이다.

둘째,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난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매년 반

복되는 말라리아, 그리고 코로나19의 경험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들 감염병은 한반도라는 땅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으며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염병에 대한 정보 교류, 방역 시스템 구축 등은 남북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의 장(場)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지속 가능한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그리고 국제기구 등과 상호 연계하여 한반도 건강 공동체 구현이라는 공통적 목표 아래 포괄적인 남북 협력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18년 말 구성된 ‘남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을 통해 감염병, 비감염병 질환, 모자보건 등 분야별 정보 교류와 협력 기반을 만드는 일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보건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2차 유행의 징후가 농후해질수록 보건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들은 국경을 더욱 봉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마냥 국경을 봉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보건의료는 가장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한다.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이 ‘한반도 생명 공동체’라는 공통 목표에 대

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추진해 간다면, 남북 주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까지 좀 더 큰 발전의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